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May vol. 113

더 쉽게 읽는 국가결산,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쉬운
국가결산제도의 개편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May

vol. 113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쉬운 국가결산제도의 개편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국가결산은 정부의 재정운용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가 전면 개편되어, 현금흐름표 도입과 재정상태표 간소화로 국가재정이 더욱 투명해집니다. 일반 국민도 국가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5월호를 통해 더 투명해지는 국가결산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4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양식
MON NOW

04

재정 캘럼

국가결산체계의 두 번째 전환:

작성되는 결산에서 읽히는 재무보고로

-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국가결산체계가 16년 만에 대전환된다.

결산보고서 누가 읽을 것인가?

-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8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5월호 기준

22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8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2

재정 캘린더



12



FIS 재정

62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64
재정정보원 소식

66
애독자 코너

재정 NAVIGATION

44
재정제도 이야기
국가결산제도 이야기

50
재정이 MONEY
재정에서 혁신과 성장으로

54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대동법은 조선후기 중앙재정을 어떻게
바꾸어놓았을까?

58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안중근, 나라살림의 대의(大義)를 묻다



54



58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국가결산체계의 두 번째 전환: 작성되는 결산에서 읽히는 재무보고로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국민 눈높이에서 읽히는
결산, 작성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현금의 흐름을 드러낸다.
지출과 자산 형성의
연계 분석



재정상태표 간소화와
주식 확대 등 정보
재배열로 신뢰성 강화



우리나라 국가결산체계는 2009회계연도를 중요한 제도적 분기점으로 삼아 발전해 왔다. 2009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은 국가결산의 작성 단위, 보고서 구성, 재무제표 작성 방식, 기금과 기업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 국가결산은 회계·기금별 결산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관서별 통합결산체계가 도입되었다. 각 중앙관서는 소관 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現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 전체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는 개별 회계와 기금 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결산정보를 중앙관서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었다.

또한 2009년 개편은 결산보고서의 형식과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전까지 「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제출되던 각종 결산서류는 「국가회계법」 체계 아래에서 결산개요,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재배치되었다. 이로써 국가결산보고서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자료를 넘어, 현금주의 예산결산, 발생주의 재무결산, 성과정보를 함께 포함하는 종합적 재정보고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국가결산이 단순히 국회승인 예산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 결산을 넘어,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정책성과를 함께 설명하는 기본 틀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의 개편이 국가결산의 “제도적 골격”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은 그 골격 안에 담긴 재무정보를 국민과 국회가 실제로 읽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표시와 공시의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개편이 회계·기금별 분산결산에서 중앙관서 통합결산 및 국가 전체 결산으로 나아간 구조적 통합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국가재무제표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정보전달 방식의 전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2009년 이후 지속되어 온 국가결산체계 발전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그 방향을 “작성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로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2009회계연도 개편의 의미:

국가결산의 통합성과 발생주의 기반 구축

2009년 국가결산체계 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결산을 개별 회계·기금 단위의 단편적 보고에서 벗어나 중앙관서 및 국가 전체 차원의 통합보고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종전에는 회계와 기금별로 세입·세출 결산서 등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각 회계와 기금의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 자금 흐름을 갖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가 한 해 동안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쓰고, 어떤 자산과 부채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이다.

중앙관서 통합결산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각 중앙관서가 소관 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결산은 개별 회계·기금의

집합을 넘어 정부 전체 재정활동을 설명하는 보고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의 도입과도 연결된다. 발생주의 회계는 단순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보유 자산과 부채, 장래 재정부담과 정책사업의 원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9년 개편이 국가결산의 통합과 발생주의 재무결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보이용자인 국회와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해 왔다. 발생주의 회계가 원론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만, 그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방대한 형태로 제공된다면 재정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유용성(decision usefulness)과 국가재정에 관한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2025회계연도 개편의 의미:

작성 중심 결산에서 이용자 중심 결산으로

2009년 개편이 국가결산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 개편은 그 틀 안에서 생산되는 재무정보의 표시방식과 설명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이해되고,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은 정보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더 잘 읽히게 하는 것이 되

는 셈이다. 물론 국가재무정보는 정확해야 하지만, 정확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과 국회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운영의 평가와 예산환류, 재정위험 관리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에 추진되기 시작한 국가결산서 체계 개편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개편의 목표를 “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로 제시하고, 기본 방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 중심 결산서 제공”, “재무제표 기반 결산 분석기능 확대”, “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재정운영표의 분야별·성질별 개편, 현금흐름표 도입, 주식체계 개편, 결산개요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변화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첫째, 국가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최초로 도입된다. 둘째, 기존의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가 대폭 간소화된다. 셋째,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던 설명정보가 주식으로 통합되고, 주식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서로 별개의 개편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로 연결된다. 현금흐름표는 국가재정의 현금 흐름을 보이게 하고, 재정상태표 간소화는 국가재정의 큰 그림을 읽히게 하며, 주식 정보 확대는 간소화된 본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신뢰성을 보완한다.

① 현금흐름표 최초 도입:

국가재정을 둘러싼 ‘현금 흐름’을 드러낸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현금흐름표의 도입일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에는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세입·세출결산은 회계·기금별, 세입·세출 과목별 집행실적을 보여주는 데 강점이 있을 뿐, 국가 전체의 현금흐름을 활동별로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금흐름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재정지출이 실제 자산 형성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기존 결산체계에서는 총지출상 자산 취득 규모와 재정상태표상 고정자산 증가 효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2020년 기준 총지출상 자산취득액은 87조 원이었으나, 재정상태표상 고정자산 증가액은 40조 원에 그쳐 둘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세입·세출결산의 지출 규모만으로는 재정지출이 실제 고정자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금흐름표 작성을 통해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현금의 각 활동별 조달 원천과 사용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재정지출의 자산연계 효과와 현금흐름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¹⁾

현금흐름표의 도입은 국민이 국가재정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비용, 수익,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만, 감가상각, 충당부채, 평가손익 등 일반 국민에게는 직관적이지 않은 회계개념을 포함한다. 반면 현금흐름표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으며, 어떤 활동을 통해 조달되고 사용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운영활동 현금흐름은 조세수입 등 경상적 정부운영의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은 자산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을 보여주며,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국공채 발행과 상환, 차입과 상환에 따른 현금흐름을 보여준다. 이 구조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의 언어와 발생주의 회계의 언어를 연결해 준다.

현금흐름표는 재정분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고에 남겨진 현금의 기말잔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증가가 운영 활동에서 발생한 안정적 현금흐름 때문인지, 국채 발행 등 재무활동 현금유입 때문인지, 또는 보유자산 처분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유입 때문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반대로 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것이 경상적 운영악화 때문인지, 장기 공공자산의 취득 때문인지, 채무상환 때문인지 구분해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금흐름의 양뿐 아니라 질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현금흐름표 도입은 2009년 이후 국가결산체계가 갖고 있던 중요한 공백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개편이 발생주의 재무제표 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025년 개편은 그 발생주의 정보와 현금주의 예산결산을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재무제표를 추가한 셈이 된다. 이는 국가재무정보의 완결성을 높이는 변화이며, 국가결산보고서를 더 균형 잡힌 재정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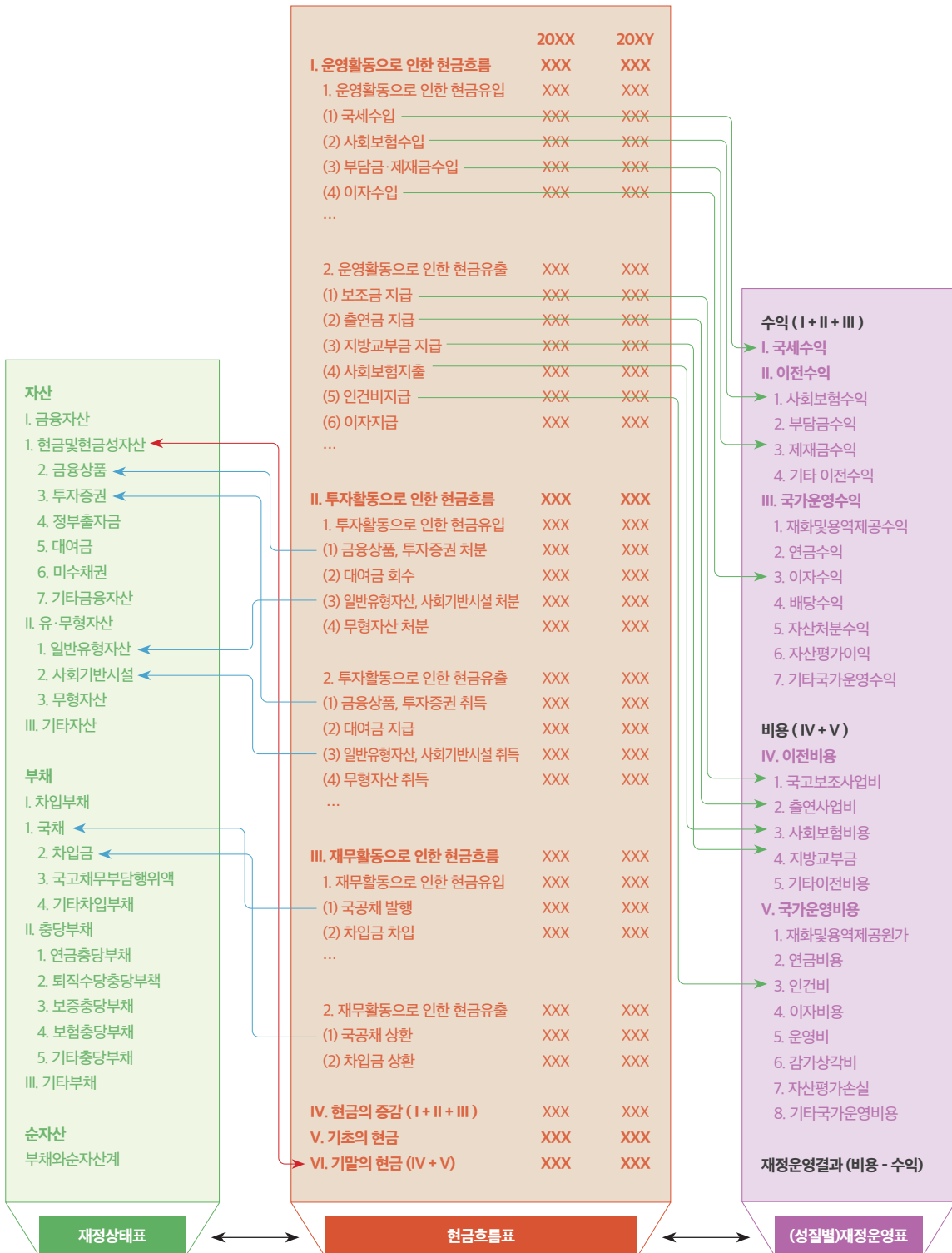
② 재정상태표 간소화:

국가재정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

두 번째 중요 변화는 재정상태표의 간소화이다.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2022), 「현금흐름표 신설 쟁점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림 1>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와 현금흐름표간 재정정보의 연계



재정상태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보여주는 핵심 재무제표이다.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자산 관리, 장래 지출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재정 상태표는 계정과목이 지나치게 많고, 표 하나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제시되어, 일반 이용자가 국가 재정의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과목을 단순화하여 8페이지에 달하던 재정 상태표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계정과목 수는 102개에서 32개로 줄이고, 분량은 8페이지에서 1페이지로 축소하고자 하였다.²

적 정보제공 방식을 따른다.

또한 재정상태표의 분류체계 자체도 정부 부문에 더 적합한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 국가재무제표에서 보여주었던 장·단기 계정 분류가 민간기업에는 적합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실익이 크지 않고 계정별 총액 파악도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단기·장기로 구분하기보다,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충당부채를 규모 순으로 정리하여 미래 지출 예상액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표 1> 개편 전 각국별 재정상태표 구성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페이지 수		1P	1P	1P	1P	1P	8P
계정과목 수	자산	10개	11개	14개	13개	12개	67개 ¹⁾
	부채	9개	9개	14개	7개	9개	19개 ¹⁾
	순자산	3개	3개	3개	6개	3개	3개
	총계	22개	23개	31개	26개	24개	89개
보고 단위		십억 달러	십억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원

주1 김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및 자기국공채 등 차감계정 포함

이번 결산보고서 체계 개편에서 추구하는 재정 상태표 간소화는 정보의 축소가 아니라 정보의 재배열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상세한 계정과목을 모두 본문에 나열하는 방식은 회계정보의 완전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재정상태표는 국가재정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여주고, 세부 내용은 주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순차적·계층

이러한 변화는 국가재무제표가 민간기업 재무제표의 형식을 단순히 따르는 데서 벗어나, 정부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기업에서는 1년 이내 현금조달을 위한 유동성과 단기 지급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동·비유동 구분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는 조세권, 국채발행 능력, 장기 공공서비스 제공의무, 연금 및 사회보험 관련 장기부담 등 재정관리의 무게중심을 두는 시간적 범위(time horizon)가 민간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상태를 설명할 때에는 유동·비

2. 기획재정부(2022),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

<그림 2> 재정상태표의 간소화



유동 구분보다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관계, 충당부채가 의미하는 미래 지출부담, 유·무형자산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 간소화는 이러한 국가재정의 해석 논리를 반영하는 변화인 셈이다.

③ 주식 정보 확대:

간소화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인다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된 세부 정보와 회계처리 근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 국가결

산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정보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 계정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정보를 주석에 포함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³

이러한 주석 정보의 확대는 재정상태표 간소화의 논리와도 연결된다. 주석이 충실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간소화는 정보 접근성 제고가 아니라 정보의 은폐 또는 과도한 요약으로 오해될 수 있다. 반대로 주석이 충실하면 간소화된 본문 재무제표는 읽기 쉬운 요약정보가 되고, 주석은 그 요약정보를 검증하고 해석하는 상세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이라는 재정상태표 상의 큰 항목 안에 어떤 세부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충당부채가 어떤 장래 지출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산·부채의 전년 대비 변동 원인이 무엇인지, 현금흐름표의 운영·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주석이 설명해 주게 되는 것이다.

주석 정보 확대는 국가재무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국가재무제표에는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자산평가 등 다양한 추정과 회계적 판단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은 숫자만 제시해서는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 어떤 기준과 가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전년 대비 변동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

되었는지, 향후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석 정보 확대는 단순한 부속자료의 확충이 아니라, 국가재무제표의 설명력과 검증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봐야 할 것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이제 ‘제출되는 문서’에서 ‘읽히고 활용되는 정보’로 나아가야 한다

2009년의 개편을 국가결산보고서의 통합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틀을 세우는 시도라고 본다면, 이번의 개편은 그 틀 안의 정보를 국민과 국회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국가재정의 흐름을 보이게 하고, 재정상태표 간소화는 국가재정의 상태를 읽히게 하며, 주석 정보 확대는 그 흐름과 상태의 근거를 설명하고 검증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결산심사, 재정분석, 예산환류, 재정위험 관리로 이어질 때, 국가결산보고서는 단순히 국회에 제출되는 법정 문서를 넘어 국가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정보기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2009년 이후 16년만에 시도되는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이 예산과정상의 하나의 절차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만 작성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서 나라살림의 성과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는 정보체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3. 기획재정부 (2025). 보도자료 “내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 전면 개편.”

국가결산체계가 16년 만에 대전환된다.

결산보고서 누가 읽을 것인가?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가재정을 보는 눈,
예산집행 중심
→ 지속가능성 중심



재정상태표
개편·현금흐름표
도입·미래부담 분석 강화



과거 결과 정리에서
미래 위험 예측
데이터로 진화



제도 운영보다
이를 읽고 활용할
전문인력 구축 필수



정책과 정치를 논하면서
국가결산은 읽지 않는다고

2026년부터 정부는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체계를 적용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양식 변경이나 회계 기준 수정이 아니다. 국가재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국가결산은 세입과 세출 중심의 예산 집행 결과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복지 확대·국가채무 증가 시대에는 단순한 예산집행 정보만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기존의 세입·세출 중심 결산체계 위에 자산·부채·현금흐름·미래부담 분석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정부 내부 회계시스템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올해부터 공개될 새로운 결산자료를 국회, 언론, 학계, 시장, 국민이 실제로 어떻게 읽고 활용하느냐가 향후 개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

되어도 활용되지 못하면 형식적 변화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단순히 정보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재정정보를 통합·단순화하고, 국가채무·순채무·현금흐름·미래부담 등 핵심 재정위험을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데 있다.

“퍼주기 복지”라고 걱정만 하십니까.
국가채무 숫자만으로는 재정위기를 알 수 없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국가재정상태표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부채 등 민간기업형 장·단기 중심 구조가 유지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정 정리가 아니다. 국가재정을 ‘유동성 중심’에서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읽는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특히 부채를 단순 총액이 아니라 차입부채와 총당부채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국가채무와 미래 부담을 보다 명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재정 논쟁은 대부분 국가채무 규모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

<표 1> 국가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자산 체계	유동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등 6개 분류	금융자산·무유형자산·기타자산의 3개 체계로 단순화
부채 체계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장기총당부채·기타부채	차입부채·총당부채·기타부채 중심으로 재구성
핵심 변화	장·단기 중심 분류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 중심 분류
정책 의미	회계기술 중심	국가채무·순채무·미래부담 분석 강화

로는 단순한 부채 총액보다 “어떤 부채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전략산업 투자처럼 미래 생산성과 세입 기반을 높이는 자산형성과 연결된다면 단순 소비성 지출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가 미래 생산성이나 재정여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같은 적자라도 미래 성장기반을 형성하는 투자형 적자와 단순 소비성 적자는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 규모 증가 자체도 더 이상 긍정적 의미만 가지지는 않는다. 실제 활용도가 낮거나 유지 비용만 증가시키는 비효율 자산이라면, 오히려 장기적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국가재정은 단순 규모보다 자산의 효율성과 미래 현금창출력까지 함께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편은 특히 미래 재정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금충당부채, 사회보험 관련 부담, 우발채무 등은 지금 당장 현금이 유출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과거의 국가결산이 단년도 예산집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읽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재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현금흐름표의 도입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현금흐름표 도입이다. 이는 단순한 서식 추가가 아니다.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구성 자체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면서, 국가 전체의 실제 현금 조달과 집행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결산은 발생주의 기반 재무제표를 운영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실제 현금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영활동 현금흐름은 국가의 경상적 재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 성장 기반 형성과 연결되며,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국가채무 의존 구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질적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표 2> 국가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의미

구분	의미	주요 내용
운영활동 현금흐름	국가의 일상적 재정운영	국세수입, 인건비, 복지지출 등
투자활동 현금흐름	미래 성장기반 투자	SOC, 연구개발, 금융투자, 공공자산 취득
재무활동 현금흐름	국가채무 및 자금조달	국채 발행·상환, 차입금 조달
정책적 의미	단순 지출 규모가 아니라 “재정의 질” 분석 가능	지속가능성과 재정구조 분석 강화

중요한 점은 현금흐름표가 단순히 “현금이 얼마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되고 어떤 활동에서 유출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26년 1월 초 발생한 국방비 미지급 이슈는 이번 현금흐름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예산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연말 세출 집중과 자금배정 문제로 인해 일부 국방 관련 지출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만으로는 국가재정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재정위기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현금흐름과 자금배정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가”만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언제·어디로·어떤 목적에 따라 흐르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이번 현금흐름표 도입은 바로 이러한 국가재정의 실제 흐름과 재정운영의 질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현금흐름표 도입만으로 재정운영의 질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발생주의 국가회계 역시 도입 초기에는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읽고 해석하며 정책 의사결정에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AI 시대, 국가결산은

미래를 읽는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잡하



게 흩어져 있던 주식정보와 보충정보를 국민과 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방대한 분량 속에 필요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위험과 구조, 정책 목적과 미래 부담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정돈하고 연결하는 방향에 가깝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만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설명정보와 연결정보가 미래 위험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핵심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AI 기반 분석은 단순 숫자 자체보다 숫자의 구조와 연결관계, 설명정보를 통해 미래 위험과 흐름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국가결산 정보는 단순히 정부와 국회만의 정보가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미래 예측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역시 국가 재정정책, 산업 투자, 국채 발행, 복지 지출, 세수 구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경제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재정지출 구조와 투자 방향은 산업별 성장전략과 시장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구조는 기업의 금리와 자금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앞으로 기업들도 국가결산을 단순한 정부 보고서가 아니라, 미래 경영환경과 산업 흐름을 읽는 데이터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국가결산은 단순히 과거 예산집행 결과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이제는 국가결산을 ‘읽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결산체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실제 정책 의사결정과 재정운영에 연결할 수 있는 해석 역량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개편의 의미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단순히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뉴질랜드는 Treasury 중심의 장기 재정전략 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통해 국가채무와 장기 재정위험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미국 역시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통해 정책의 재정 효과와 미래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해외 주요국들은 단순히 “숫자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국가결산 작성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전담 기능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결산과 현금흐름, 장기 재정위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앞으로 국가결산 개편의 성패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방대한 국가재정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하며 정책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단순한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기관을 넘어, 국가결산과 현금흐름, 재정위험, 장기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재정데이터 허브 역할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결국 국가결산 개편의 핵심은 재무제표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숫자를 읽고 해석하며 미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만드는 데 있다.

국가결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결산을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의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간기업 회계와 달리 국가회계와 재정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관련 연구와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국가결산이 AI 시대의 핵심 정책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회계지식만이 아니라 재정·경제·산업·데이터 분석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결국 국가결산 개편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그 데이터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번 국가결산보고체계 개편은 단순히 회계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예산집행 결과의 확인’에서 ‘재정상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올해 공개될 새로운 결산자료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읽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정보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회·언론·학계·시장·국민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정책 논의에 연결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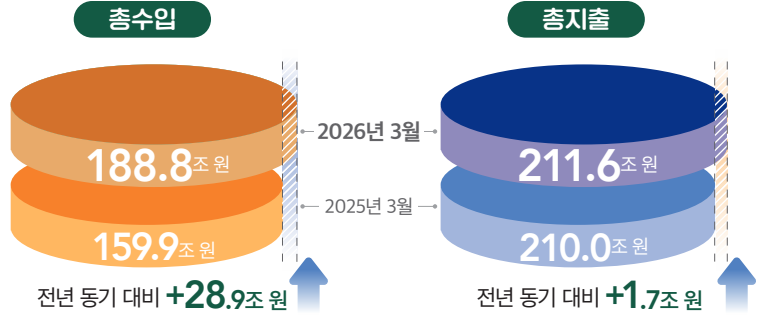
국가결산은 더 이상 과거를 정리하는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의 국가결산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5월호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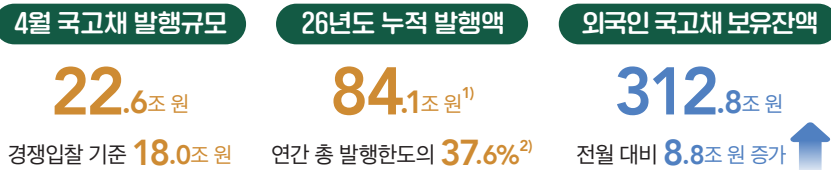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주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주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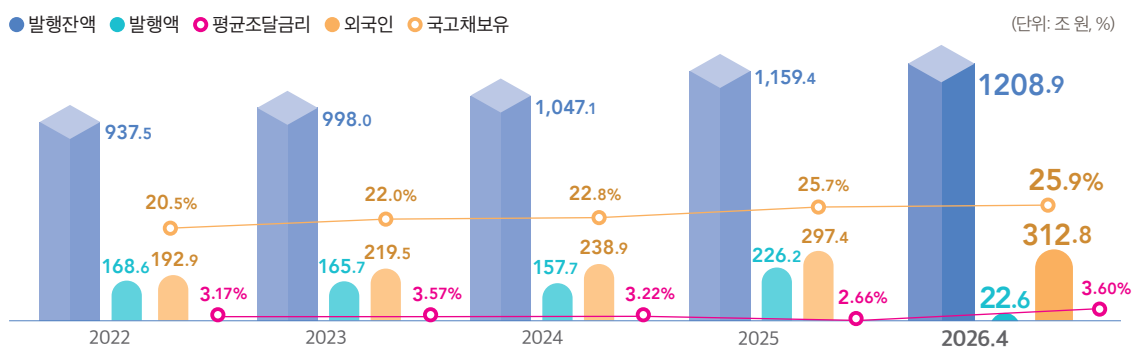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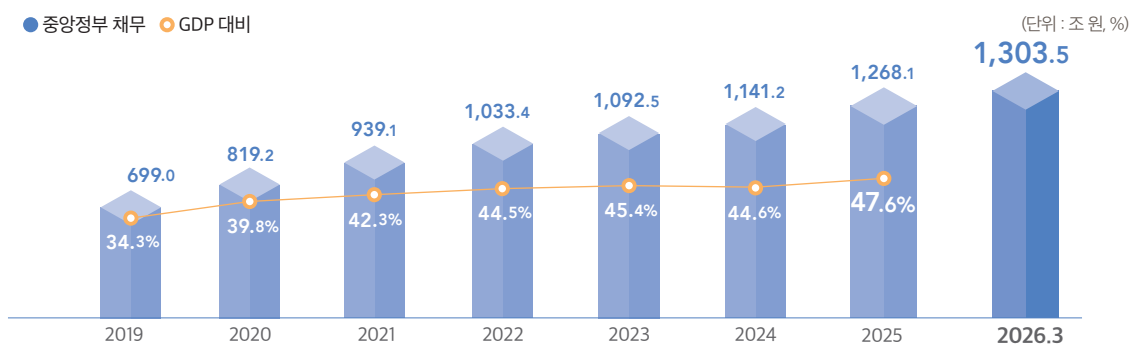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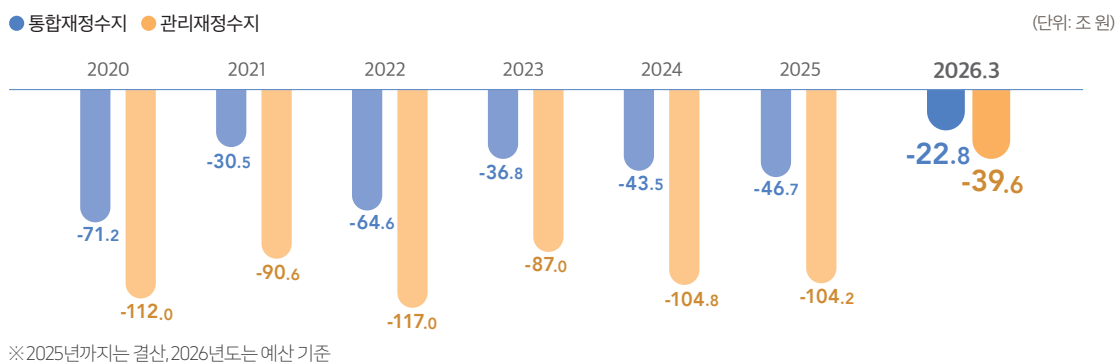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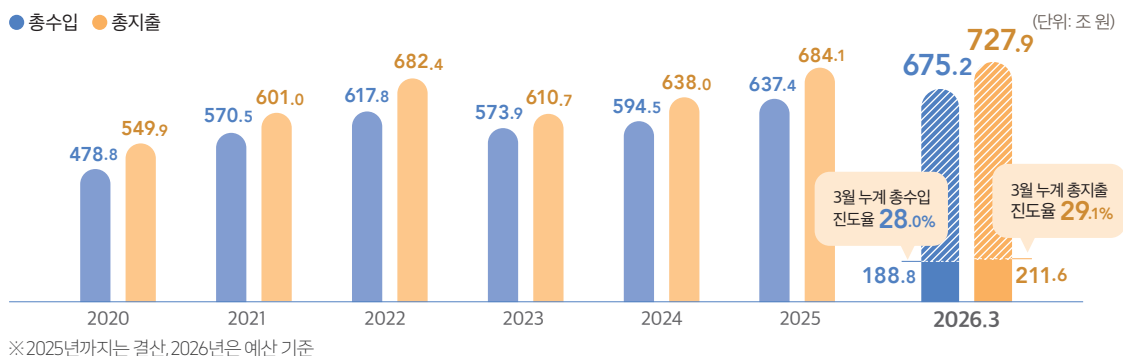


-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3월 기준
 주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주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5→2020년 기준년 개편) 반영
 주 4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수정 반영 예정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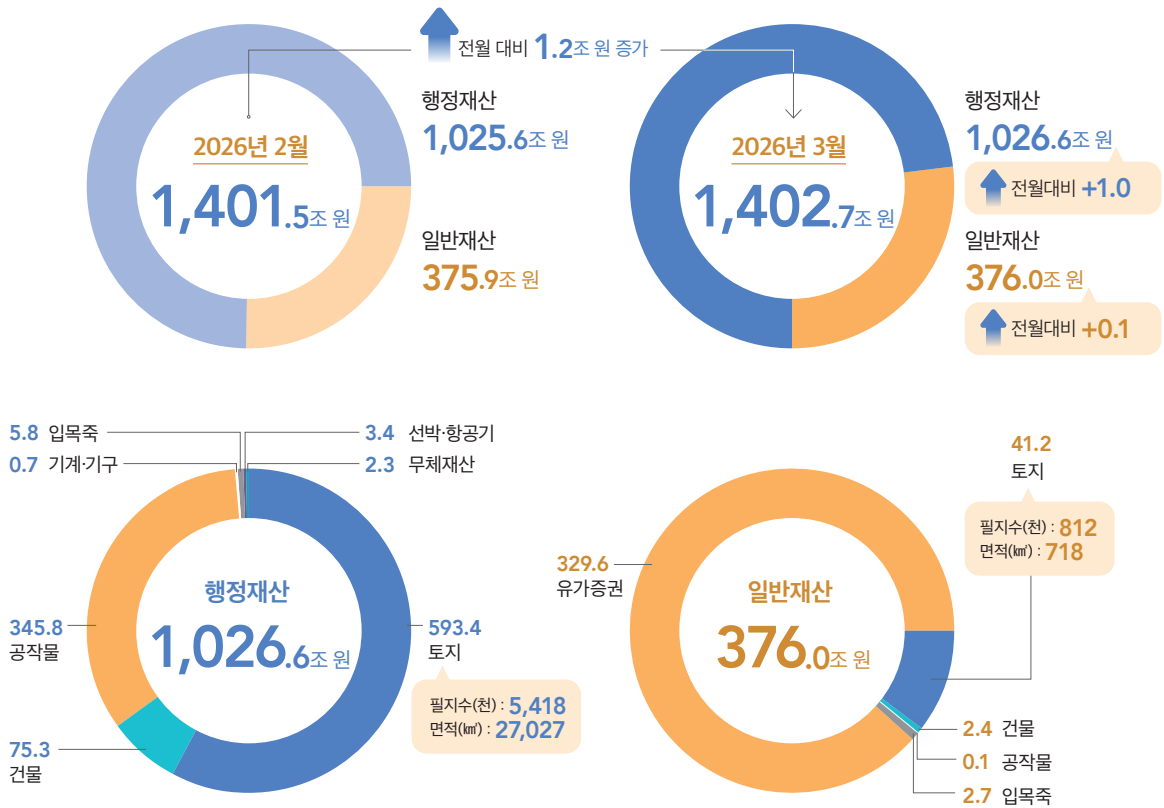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0.7조 원 포함시 84.8조 원
 주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한도액 225.7조 원 중 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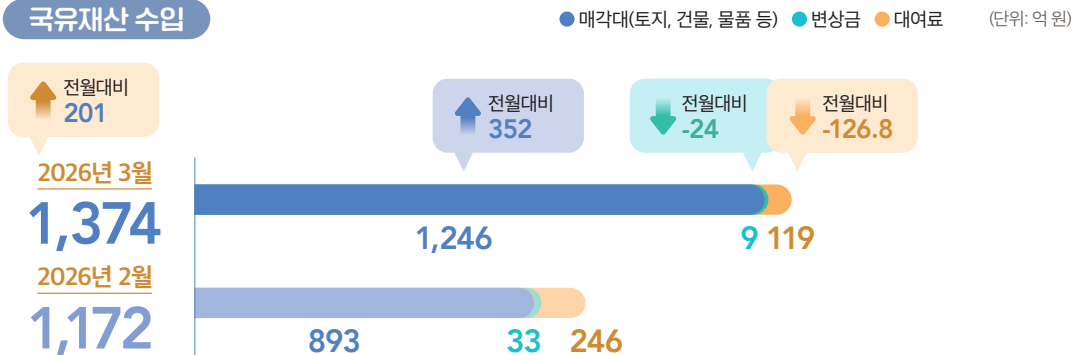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 주 1 2026년 자료는 잠정치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국유재산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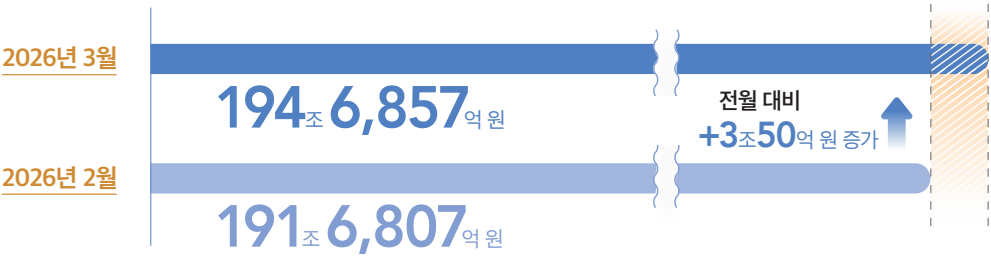


- 주 1 2026년 자료는 잠정치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제품,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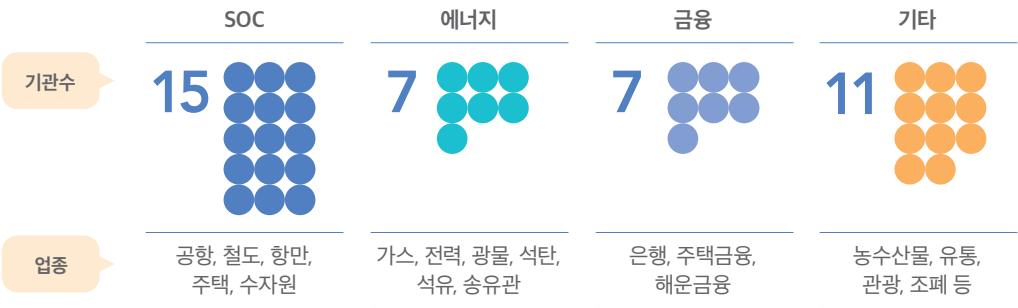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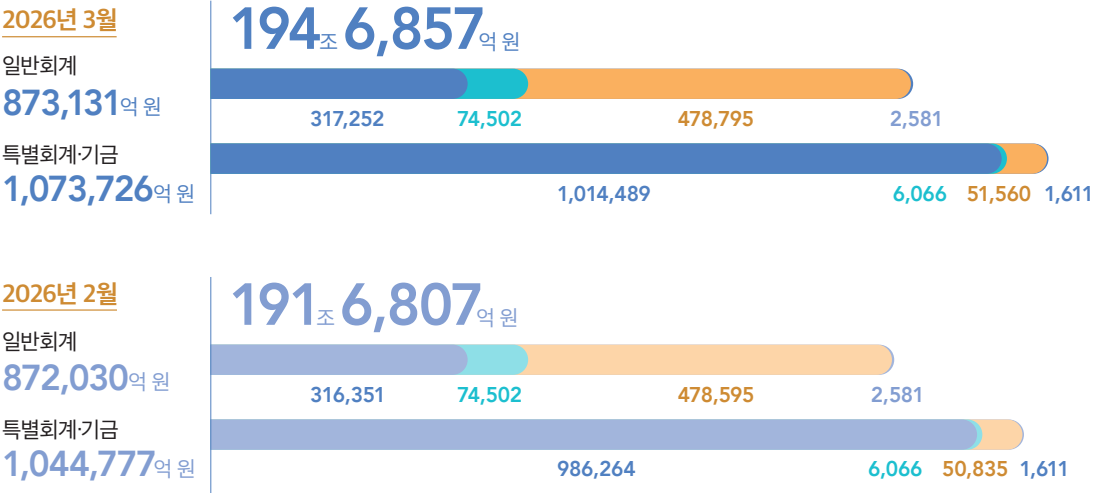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5월호에서는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6개와 우수 프로그램 6개를 선정·발표함

자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및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26.4.6.), 「61개 중앙관서 2년 연속 80% 이상 성과목표 달성」

우수기관

성과달성도 및 개선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을 종합하여 선정된 기관을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무:** 식의약품 등의 안전 확보와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람중심 안전관리로 국민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나아가 국민 안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전:**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680	1,666	34.4	99.2
전략목표 II	식의약 안전사고 완벽차단을 위해 선제적 위해예방을 수행한다	257	253	5.2	98.8
전략목표 III	국민건강 보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선진화한다	1,105	1,093	22.6	98.9
전략목표 IV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1,740	1,687	34.8	96.9
전략목표 V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156	147	3.0	94.1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주 달성 여부는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이하 동일)

문화체육관광부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 국가

※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달성도 개선 부처로 우수기관에 선정(2024년도 61.8% → 2025년도 73.5%)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2,858	12,198	18.1	94.9
전략목표 II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2,277	11,705	17.3	95.3
전략목표 III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3,395	13,318	19.7	99.4
전략목표 IV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4,044	13,586	20.1	96.7
전략목표 V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6,254	15,623	23.1	96.1
전략목표 VI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161	1,132	1.7	97.5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해양수산부

임무: 해양영토(44만km²,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세계로 열린 살기 좋은 해양영토를 개척한다	16,638	15,912	27.3	95.6
전략목표 II	재난 안전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강화한다	24,308	22,331	38.3	91.9
전략목표 III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한다	22,754	20,073	34.4	88.2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지식재산처

임무: 지식재산 창출·권리화·활용 촉진 및 보호를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
비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1,278	1,266	35.8	99.1
전략목표 II	지식재산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	2,295	2,272	64.2	99.0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전략
목표
2



프로그램
목표
5



성과
지표 수
5



초과달성
0



달성
5



미달성
0



달성률
100.0%



투입
0



과정
0



산출
0



결과
5

농촌진흥청

임무: 농업·식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복지와 농촌증진
비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7,322	7,031	74.6	96.0
전략목표 II	농업기술 보급·확산으로 농촌진흥을 촉진한다	2,444	2,390	25.4	97.8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전략
목표
2



프로그램
목표
7



성과
지표 수
7



초과달성
1



달성
6



미달성
0



달성률
100.0%



투입
0



과정
0



산출
1



결과
6

병무청

임무: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
비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

구분	내용	예산	결산	비중	집행률
전략목표 I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제고한다	225	214	8.5	95.1
전략목표 II	최적의 병력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한다	39	38	1.5	98.8
전략목표 III	보충역 및 대체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67	66	2.6	98.7
전략목표 IV	병역이행의 자긍심 및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2,261	2,199	87.4	97.3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5년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지표 성격



우수 프로그램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개선 노력·성과 우수성 등 정성적 기준을 종합하여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1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그램 목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 및 국민의 영양·안전관리를 통해 식품소비 안전보장 환경을 조성

주요 성과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및 저감 가공식품·조리식품 개발, 영양성분 정보 제공 확대
- 농수산물 신속검사 및 검사대상 확대로 부적합 생산품 유통·판매 선제적 차단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857억 원	99.6%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률 (하향지표)	0.97%	0.82%	115.5%
854억 원					

2 소비자후생 증진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 목표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주요 성과

- 결혼서비스분야 종합적인 피해예방 지원방안 마련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피해구제에 기여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622억 원	99.5%	소비자 피해 해결 조치 비율	30.8%	32.2%	104.5%
619억 원					

3 국내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목표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주요 성과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코리아둘레길 등 생태레저 체험관광 확대로 국민여행 총량 확대(4.5→4.6억일)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8,602억 원	97.2%	국민여행 총량	4.6억일	4.6억일 ¹⁾	100.0%
8,359억 원					

주 ¹⁾ '25년도 실적치는 잠정치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내용을 반영함

4 항공기 사업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목표 항공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주요 성과

- 국내 최초 개발 KF-21가 체계개발 착수 9년 만에 양산에 돌입
- 보라매 R&D사업 인니측 분담금 확보, KF-21 수출 등 협의 진행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2.7조 원	94.3%	항공기 사업의 적기 사업 완료율	100%	100%	100.0%
2.5조 원					

5 지방교육정책 지원 (교육부)



프로그램 목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성과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노력으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상승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5.9조 원	99.8%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85.2점	89.2점	104.7%
5.9조 원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률	93%	94%	101.1%

6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프로그램 목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활용도 높은 국가기본통계를 생산·지원한다.

주요 성과

-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수요를 반영한 통계 개발·개선 및 제공

2025년 프로그램 규모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예산	집행률				
결산					
3,070억 원	93.0%	경제·사회통계 정보서비스 이용률	0.33%	0.37%	112.1%
2,857억 원					

주요국 월간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6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조 4,828억 달러 9.8%	3조 6,514억 달러 2.4%	1조 1,686억 달러 적자 총수입 총지출
독일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80억 유로 △7.4%	1,298억 유로 5.8	319억 유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일본 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1조 2,370억 엔 8.4%	101조 886억 엔 3.1%	9조 8,516억 엔 적자 총수입 총지출
프랑스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68억 유로 11.9%	1,180억 유로 4.6%	312억 유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영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조 2,308억 파운드 8.1%	1조 3,628억 파운드 5.6%	1,320억 파운드 적자 총수입 총지출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March 2026(4.30.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March 2026(4.21.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4.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6(5.6. 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rch 2026(4.23. 발표)

대한민국 3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88.8조 원 28.0%	211.6조 원 29.1%	22.8조 원 적자 총수입 총지출
------------------------	--------------------	---------------------	-------------------	-------------------	-----------------------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5.

해외재정동향 (5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이란 전쟁 장기화가 미국 인플레이션·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3월 미국 재정수지는 이란 전쟁지출 지연 속 적자 확대
-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02 독일

- 중동 지정학적 쇼크로 GDP 성장률 하향 조정 및 물가 전망 상향 조정
- 역성장 우려 속 1분기 GDP는 성장, 그러나 고용 악화 및 하향 조정 리스크
- 독일 세수추계위원회, 2026~2030년 세수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03 프랑스

- 중동 위기 여파로 성장률 전망 하향 및 60억 유로 규모의 지출 동결 추진
- 재정감시기구,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에 따른 적자 감축 목표 차질 우려 제기
-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지원 확대 검토

04 영국

- 영국 3월 소비자물가 3.3%로 상승, 이란 전쟁 여파 본격화
- 영란은행, 이란 전쟁 대응 4월 통화정책 시나리오 및 경제 전망 발표
- 영국 1분기 실질 GDP 0.6% 성장, 서비스 부문 주도 단기 회복세 진입

05 일본

-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0.75% 동결하기로 결정
 - 경제성장률은 2026년 둔화 예상, 정부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 전망

06 중국

-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 재정지출 집행 속도 확대
 - 2026년 1분기 재정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7조 4,700억 위안으로 집계 발표
 - 1분기 재정지출은 연간 예산지출의 24.9%를 차지해 최근 빠른 집행 속도를 보임

국제기구

01 OECD

- OECD 근로소득과세(Taxing Wages 2026) 보고서 발표

02 IMF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공개

주요국
동향4.8. | 이란 전쟁 장기화가 미 인플레이션·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¹⁾

- 달라스 연준 연구(4월 7일)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2026년 말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1분기(약 3개월)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에서 16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연율 기준 인플레이션을 5%p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
 - 봉쇄가 1분기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의 누적 효과는 약 0.35%p, 세 분기(약 9개월) 지속 시에는 연말 인플레이션이 최대 1.8%p 상승할 수 있으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0.18~0.49%p 추가 상승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가 경로에 따라 물가 경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 상존
- 4월 8일 공개될 3월 연준 회의 의사록 전망에 대한 보도는 연준 위원들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에너지 가격 충격을 반영해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전체·근원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모두 연말 2.7% 수준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을 언급
 -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2025년 12월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2026년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 2.4%를 3월 회의에서 2.7%로, 식품·에너지 제외한 근원 PCE는 2.5%에서 2.7%로 각각 0.3%p, 0.2%p 상향
- 연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 기간이 3~6개월로 길어질 경우, 유가가 132~167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대 1.47%p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해, 단기적으로는 통화완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
 - 달라스 연준과 연준 의사록 관련 보도는 이란 전쟁이 미국 인플레이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가격 충격이 단기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만,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

4.10. | 3월 미국 재정수지: 이란 전쟁 관련 지출 지연으로 적자 소폭 확대²⁾

- 미국 연방정부의 3월 재정수지는 1,6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란 전쟁 관련 군사지출 일부가 4월 이후로 이연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재무부 자료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3월 개인 소득세 환급은 전년 동월 대비 150억 달러(22%) 증가한 850억 달러로 나타났고, 기업 환급은 50억 달러(215%) 증가한 80억 달러를 기록해, 감세·공제 확대와 환급 일정이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
 - 기사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군사비 지출이 회계상 4월 이후로 이연되면서, 3월 적자는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으나, 향후 몇 개월 동안 국방·안보 지출 확대가 누적 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1) <https://www.reuters.com/business/iran-war-may-boost-inflation-not-expectations-per-dallas-fed-research-2026-04-07/>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minutes-march-meeting-could-flesh-out-how-policymakers-view-war-risks-2026-04-08/>

- 이란 전쟁과 기존 감세·관세 조치의 결합 효과를 반영한 의회예산국(CBO) 전망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8,530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CBO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연장, 관세로 인한 세수 구성 변화,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국방·이자지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 둔화가 없더라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
- 3월 재정수지 관련 로이터 기사와 CBO 전망은, 이란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군사비 이연 등으로 월별 적자 흐름에 불규칙성을 주지만, 중기적으로는 국방비 확대·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연간 재정적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5.7. | 미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³⁾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Trade Expansion Act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고 판결, 관련 관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결정
 -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것은 국제수지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 상품교역수지 개선과 대외 협상 지렛대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국제수지 위기'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
 - * 무역법 122조(TRADE EXPANSION ACT §122):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일시적(GLOBAL)'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970년대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상호관세 권한 판결 직후 이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면서 다시 쟁점이 되었으며, 이번 CIT 판결에서 법적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 징수를 영구 금지하고 이미 부과된 관세를 환급할 것을 명령
 - 단, 판결 범위가 원고에 한정돼 있어 다른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징수는 별도의 소송·판결이 없는 한 당장은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이번 판결은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로 내놓은 글로벌 10% 관세 역시 사법부 제동에 직면하면서 관세 정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제기
 -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수십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회의 과세·관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무효화한 바 있으며, 이번 CIT 판결로 IEEPA 상호관세와 10% 글로벌 관세라는 두 축 모두가 법적 근거를 상실
 - 트럼프 행정부는 CIT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플랜 C' 관세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세 정책의 법적 형태는 바뀌더라도 대외 압박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

2) <https://www.reuters.com/markets/us/us-march-budget-deficit-rises-slightly-164-billion-war-outlays-delayed-2026-04-10/>

3) <https://www.reuters.com/world/us-trade-court-rules-against-trumps-10-global-tariff-2026-05-07/>



4.22. | 중동 지정학적 쇼크로 GDP 성장을 하향 조정 및 물가 전망 상향 조정⁴⁾

-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5%로 하향 조정
 - 이란 전쟁 확전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과 원자재 비용 상승이 수출 주도형 제조업에 타격을 준 결과로 분석
 - 2027년 성장을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0.9%로 낮추며 중장기 성장 모멘텀 악화를 공식화
- *카타리나 라이히(Katherina Reihe)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경제가 완만한 회복 경로에 있으나 외부 지정학적 충격으로 역풍이 심화됐다"고 진단
- 한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여파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 독일 정부는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6년 2.7%, 2027년 2.8%로 각각 상향 개편
- GDP 전망치 하향으로 경제 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헌법상 규정된 '부채 준칙(Debt Brake)'의 경기 연동 조항이 발동
 - 이로인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27억 유로의 추가 차입 한도를 확보함
- *라이히 장관은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더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 에너지 비용 감축, 관료주의 타파 등 광범위한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이 시급하다고 비판

4.30. | 역성장 우려 속 1분기 GDP는 성장, 그러나 고용 악화 및 하향 조정 리스크⁵⁾

- 독일 연방통계청, 2026년 1분기 GDP 성장을 잠정치 고시 및 이전 분기 수정
 -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며 시장의 역성장 우려를 딛고 반등
 - 그러나 경기 지표의 불안정성도 나타나 2025년 4분기 최종 GDP 성장률은 하향 수정(0.3%→0.2%)
- 일부 전문가들은 지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향 조정 가능성 경고
 - ING 은행의 경제분석가 카스텐 브르제스키(Carsten Brzeski)는 "이번 1분기 속보치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3월 집계 데이터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확정치 발표 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 고유가 지속과 구조적 개혁 부재 상황 고려 시 이번 성장의 지속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
- 실업자 300만 명 돌파 및 고용 구조 악화
 - 4월 기준 실업자 수가 300만 8,000명을 기록하며 절대적 실업자 수 고착화 현상을 보임
 - *전월 대비 단순 수치는 1만 3,000명 감소했으나, 계절조정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실업자수 300만 명 이상 기록
 - 연방고용청의 다니엘 샤텐베르크(Daniel Schattenberg)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
 - *전년 동기대비 구인 건수가 5,000개 감소한 64만 1,000개 기록
 - 전년 2월 비교 시 제조업 부문에서만 약 18만 개의 양질의 사회보장 기여 일자리 증발
 -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자리가 일부 창출되었으나,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전혀 상쇄하지 못하는 상태

4)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economy-ministry-halves-2026-growth-forecast-raises-inflation-outlook-2026-04-22/>
 5)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grows-by-03-first-quarter-preliminary-data-shows-2026-04-30/>
 6)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ys-tax-experts-cut-revenue-forecast-adding-pressure-strained-budget-2026-05-07/>

5.7 | 독일 세수추계위원회, 2026~2030년 세수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⁶⁾

- 경기 침체 가속화로 인해 2026~2030년 총세수 전망치가 기존 예측 대비 875억 유로 하향 조정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쇼크와 경제성장을 하락, 실업자 300만 명 기록 등 거시경제 악화가 세수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2026년에는 기존 전망보다 99억 유로 줄어든 3,820억 유로, 2027년에는 101억 유로 감소한 3,950억 유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앞두고 가용 재원이 좁아지며 재정 운용의 딜레마 심화
 - 연방정부는 1,965억 유로의 신규 차입과 GDP 대비 3.1%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2027년 예산안 핵심 목표를 지난 4월 29일에 승인
 - 독일 경제연구소(DIW)와 상공회의소(DIHK)는 세금 감면 요구가 좁아진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으며, 성장 회복 없이는 정부의 조치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 재무장관의 증세 기조 발표와 함께 여당 연정 내부의 정책·이념 갈등 격화
 -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도발이 경제 모멘텀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중산층 감세를 위해 고소득층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이번 세수 결산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보수 진영과 사회민주당 간 복지·세제 공방으로 이어져 메르츠 총리의 경제 능력 불신 여론과 극우 AfD의 지지율 역전 등 정국 리스크 고조



4.21. | 프랑스, 중동 위기 여파로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및 60억 유로 규모의 지출 동결 추진

- 프랑스 재무부는 중동 분쟁과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여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함⁷⁾
 - 2026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3%보다 높은 평균 1.9% 수준으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유가가 5월 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
- 세바스티앙 르코르뇌 총리는 중동 위기가 프랑스 공공재정에 미치는 비용이 최소 6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 목표 유지를 위한 지출 동결 방침을 밝힘⁸⁾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공공재정 적자 목표인 GDP 대비 5%를 유지하기 위해 약 60억 유로 규모의 지출 동결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 부문 약 40억 유로와 사회보장 부문 약 20억 유로로 구성
 - 주요 재정 부담 요인으로는 성장을 전망 하향,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 해외 군사작전 비용 확대가 제시되었으며, 부채 이자 부담의 추가 비용은 중간 시나리오 기준 36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되고 해외작전 비용은 2026년 10억 유로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4.22 | 프랑스 재정감시기구,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에 따른 적자 감축 목표 차질 우려 제기⁹⁾

- 프랑스 재정감시기구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2029년까지 공공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려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함
 - 중동 분쟁으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프랑스와 유로존의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확대
 - 재정감시기구는 순기초지출 경로가 유지되더라도 경제 상황, 금리 추이, 성장에 따른 세입 반응에 따라 실제 적자 감축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

5.6. | 프랑스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지원 확대 검토¹⁰⁾

-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프랑스 경제 지원의 규모와 차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프랑스 정부는 다음 주 초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가 상승과 경제적 파급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지원보다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 다만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대상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 업종과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방식을 유지할 방침
- 기존 지원책의 재정비용이 이미 수억 유로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추가 지원 확대의 구체적 비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음
 - 현재까지 발표된 지원책 비용은 약 3억 8천만 유로로 추산되며,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 유류대출을 포함할 경우 약 4억 7천만 유로로 증가



7)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finance-ministry-trims-growth-outlook-hikes-inflation-estimate-2026-04-14/>
 8)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4/21/sebastien-lecornu-confirme-un-cout-de-6-milliards-d-euros-lie-a-la-crise-au-moyen-orient_6681964_823448.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
 9)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economic-turbulence-rate-hikes-could-jeopardise-frances-deficit-efforts-fiscal-2026-04-22/>
 10)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5/06/sebastien-lecornu-se-resout-a-envisager-une-hausse-des-aides-economiques-pour-faire-face-a-la-prolongation-de-la-guerre-au-moyen-orient_6685828_823448.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



4.22. | 영국 3월 소비자물가 3.3%로 상승, 이란 전쟁 여파 본격화¹¹⁾

- 영국 연방통계청(ONS) 발표 결과,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 지난 2월(3.0%)에 이어 대폭 상승한 수치로, 중동지역의 군사적 갈등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원유 가격 급등이 유류비와 내륙 물류비용의 폭등을 촉발함
 -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위축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을 지연시키고, 거시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를 다시 고조시킴
- 물가상승률 통제가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영란은행(BoE) 금리인하 정책의 조기 전환이 불투명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분석하며, 고금리 기조가 최소 올해 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
 - 영국 국채(Gilt) 금리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
- 공급망 파편화, 기업의 가스·전기 에너지 비용 증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우려
 - 물류 마비에 따른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이 소매 물가로 전이되는 2차 파급효과(Second-round effects)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
 - 스타머(Starmer) 정부의 경제 안정화 계획 수립에 심각한 재정적·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여야간 연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됨

4.30. | 영란은행, 이란 전쟁 대응 4월 통화정책 시나리오 및 경제 전망 발표¹²⁾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은 통화정책 리포트를 통해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시나리오와 물가상승률 전망을 발표
 -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2026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함
 - 공급망 마비와 유가 급등세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의 조기 안정이 불가능해져 영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혹한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 고물가 고착화 리스크에 직면함에 따라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고금리 긴축 기조 장기화 불가피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물가상승률 목표치(2.0%) 사수를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유지하겠다는 긴축 강화 시나리오를 제시
 - 이에 따라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기업들의 차입 비용 증가와 금융시장의 자본 조달 위축을 심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함

11) <https://www.reuters.com/world/uk/uk-inflation-rises-33-iran-war-impact-begins-hit-2026-04-22/>

12) <https://www.reuters.com/business/bank-england-forecast-scenarios-april-2026-2026-04-30/>

-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고조
 - 영란은행은 물가상승률 전망 상황 조정과 함께 영국의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본격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
 - 고유가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생산성 악화는 스태머 내각의 예산 수립 및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

5.14. | 영국 1분기 실질 GDP 0.6% 성장, 서비스 부문 주도 단기 회복세 진입¹³⁾

- 통계청 발표 결과, 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 중동지역 군사 갈등 및 에너지 인프라 타격에 따른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서비스 부문이 0.8% 성장하며 단기 경기회복 흐름을 견인
 - 3월 한 달 기준으로 0.3% 성장을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 추가급등 우려에 직면한 일부 기업들이 조기 생산 활동을 대거 앞당긴 데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됨
- G7 국가 대비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통계적 착시 및 하반기 경기하락 리스크 공존
 - 이번 기록은 유로존(0.1%)과 미국(0.5%)를 앞질렀으나, ING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물가 급등기와 연례 가격 인상 시점에 맞춘 통계청의 계절조정 통계 보정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함
 - ICAEW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유가 충격 및 호르무즈 해협 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 되는 2분기부터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급격한 모멘텀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
- 견고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위협에 따른 고금리 긴축 압박과 여당 내 리더십 위기 확산
 - 1분기 성장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되면서 영란은행이 단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6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전격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라 옹호했으나, 노동당 내각의 사임 압박과 야당의 리더십 위기 비판으로 국채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음



13) <https://giftarticle.ft.com/giftarticle/actions/redeem/21f04468-e385-453c-9c92-098ce9738472>

14) Bank of Japan,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428a.pdf;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April 2026)". <https://www.boj.or.jp/en/mopo/outlook/gor2604b.pdf>



4.28. |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¹⁴⁾

-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0.75% 동결하기로 결정

- 정책위원회에서 찬성 6명(UEDA Kazuo 총재 포함), 반대 3명의 표결 결과에 따름

- *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은 물가안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해외 경제 상황 파급 효과로 인해 일본 내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히 부풀려진 상태에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중립 금리에 최대한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 즉 약 1.0% 수준으로 권고했으나 다수 결로 부결

- 경제성장률은 2026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7년부터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소득·소비의 선순환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중동 정세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완화적인 금융 환경, 그리고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5~3.0%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도달한 뒤, 이후에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주로 오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률은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중동 정세의 향후 전개가 금융·외환 시장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 활동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Outlook Report)과 이번 4월 전망을 비교해 보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고,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모두 원유 가격 상승을 반영함
 -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경제 활동에 하방 압력 위험이 크고, 물가는 상방 압력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됨
 -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하고 기업들이 임금과 가격 인상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 일본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

(단위: %)

	실질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제외)		근원 물가상승률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26. 4월	'26. 1월	'26. 4월	'26. 1월	'26. 4월	'26. 1월
2026	0.5	1.0	2.8	1.9	2.6	2.2
2027	0.7	0.8	2.3	2.0	2.6	2.1
2028	0.8	-	2.0	-	2.2	-

주 전망 수치는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예측치(점 추정치) 중앙값을 나타냄



4.24. |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 재정지출 집행 속도 확대¹⁵⁾

- 중국 정부는 2026년 1분기 재정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7조 4,7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2025년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을 앞당긴 결과로 분석
 - 1분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6조 1,600억 위안을 기록
- 1분기 재정지출은 연간 예산지출의 24.9%를 차지해 최근 수년 중 가장 빠른 집행 속도를 보임
 - 중국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지출 확대, 정부채 발행, 지방정부 이전지출 확대 등을 예고
- 분야별로는 민생 관련 지출이 확대되며 내수와 사회안전망 보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1조 4,800억 위안, 보건 지출은 12.1% 증가한 6,554억 위안을 기록
 - 교육 지출도 1분기 중 1조 위안을 초과해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확대
-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핵심 자원인 토지매각수입은 감소세를 지속
 - 1분기 정부 토지매각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방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 외신은 중국 지방정부가 그간 토지사용권 매각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부동산 침체로 지방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15) https://english.www.gov.cn/archive/statistics/202604/24/content_WS69eb711ec6d00ca5f9a0aa15.html

국제기구
동향4.22. | OECD 근로소득과세(TAXING WAGES 2026) 보고서 발표¹⁶⁾

- OECD는 「Taxing Wages 2026」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별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격차*와 순평균세율을 OECD 평균과 비교

* 조세격차는 개인소득세, 근로자-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에서 가족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총노동비용으로 나눈 지표를 의미

- 자녀 없이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하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2025년 한국 기준 24.8%로 전년 대비 0.13%p 상승

- 2025년 OECD 평균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5.1%로,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

* 콜롬비아(0.0%), 칠레(7.5%), 뉴질랜드(20.8%), 멕시코(21.7%), 스위스(23.0%)

- 장기 추이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단신 근로자 조세격차는 2000년 16.4%에서 지난해 24.8%로 2025년 동안 8.5%p 상승하며 한국의 조세격차가 빠르게 오르고 있음.

- 같은 기간 OECD 평균 단신 근로자의 조세격차는 36.1%에서 35.1%로 1.0%p 하락해 한국과 OECD 평균 간 격차는 축소되는 추세

- 자녀 관련 급여 및 조세상 혜택으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5년 한국 기준 14.0%로 단신 근로자보다 10.8%p 낮음.

- 25년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6.2%로, 한국은 해당 가구 유형에서도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조세격차를 기록

- 2025년 한국의 평균임금 단신 근로자의 순 평균세율은 16.5%로 OECD 평균(25.1%)보다 낮은 수준

- 단신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은 임금 총액의 83.5%로, OECD 평균(74.9%)을 상회

-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기혼가구의 경우 순평균세율은 4.5%로 OECD 평균(14.7%)보다 크게 낮았으며, 실수령액은 임금 총액의 95.5% 수준

16) OECD (2026), Taxing wages 2026: The progressivity of Labour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a5169ef-en>



4.14.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공개¹⁷⁾

※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발간되며, 중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중동 전쟁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6년 4.4%로 상승한 후 2027년 3.7%로 하락세 예상
 - *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하방 위험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되는 분쟁과 지정학적 분열, 인공지능 생산성에 대한 재평가, 무역 긴장 재발은 성장세를 크게 둔화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 공공 부채가 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경제의 취약성은 커지는 반면,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되거나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면 경제 활동은 활발해질 수 있음
 -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적응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틀을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표> 국가 그룹별 세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구분	'26년 4월 전망		'26년 1월 전망 차이	
	2026	2027	2026	2027
세계 경제 성장률(WORLD OUTPUT)	3.1	3.2	-0.2	0.0
선진국	1.8	1.7	0.0	0.0
신흥·개발도상국	3.9	4.2	-0.3	0.1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4.4	3.7	0.6	0.3
선진국	2.8	2.2	0.6	0.1
신흥·개발도상국	5.5	4.6	0.7	0.3

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april/english/text.pdf>; IMF Blog, "Wars Impose Lasting Economic Costs, While More Defense Spending Means Hard Choices".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6/04/08/wars-impose-lasting-economic-costs-while-more-defense-spending-means-hard-choices>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국방비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봄**
 - 전형적인 전쟁 급증기에는 국방비 지출이 2년 반 동안 GDP 대비 약 2.7%p 증가하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재정 적자를 통해 조달함
 - 국방력 증강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약 2.6%p 증가 및 공공 부채는 3년 이내에 약 7%p 증가하며, 특히 전시 상황에서의 공공 부채는 약 14%p 급증하고 사회복지 지출은 감소함
 - 국방비 지출의 승수 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에 가까우나, 실제 효과는 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는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무기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무력 충돌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넘어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분쟁의 전 세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거시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금융 위기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이러한 손실은 통화, 재정, 대외 부문 전반에서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데, 경제 회복은 대체로 느리고 불균형하게 진행되며 분쟁이 끝나 평화가 유지되더라도 주로 노동 부문의 회복이 성장을 이끄는 반면 자본축적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
 -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부채를 재조정하며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재건을 위한 내부 개혁이 필수적이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원을 회복하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냄
- **결론적으로, 전쟁은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방비 증가는 예산 운용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함**
 - 전쟁은 단기 충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손실(economic losses)을 초래함
 - 국방비 증가는 안보 대응에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을 수반하고 특히 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 공공지출과의 균형 문제(spending trade-offs)가 발생함
 - 전쟁이 끝난 뒤에도 경제 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policies for recovery)이 필요함



05

2026 May

| 재정 |



기획예산처,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27년 예산방향 논의 (기획예산처, 5.7.)

- 기획예산처는 5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이틀간 국립 세종 도서관에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차년도 재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9년 이후 매년 개최
- 특히 올해는 기존 지역 건의사업의 단순 청취를 넘어, 예산 실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개별 지방정부와 일대 일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예정
- 또한, 이번 협의회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처가 연초부터 지속 추진해온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
- 본격적인 편성업무 전 예산 현장을 100군데 이상 방문하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국민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 등에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27년 예산안에 환류할 계획
- 금번 협의회는 실·국장 면담 후 별도로 과장급 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하여 컨설팅의 내실을 강화
- 기획예산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후에도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를 이어감으로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나갈 예정. 현장에서 취합한 의견들은 면밀히 살펴 '27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



기획예산처, 30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27년 예산 편성 주요 방향을 긴밀히 소통 (기획예산처, 5.12.)

- 기획예산처는 5.12(화)부터 5.19(화)까지 6일간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개최
-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예산안 편성 전 재정당국이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차년도 예산의 핵심 투자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재개

- 금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
- 이번 예산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단순히 각 부처에서 '27년 예산 주요 투자 방향을 재정당국에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에 대한 실·국장을 포함한 기획처 예산실 직원들의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
- 조용범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처별 중점 투자 방향을 단순 청취하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부처 역점 사업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기획처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국정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할 계획
- 기획예산처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27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각 부처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

| 경제 |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국가데이터처, 5.6.)

-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상승
- 전월비는 농축수산물물은 하락하였으나,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고,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5%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비는 농축수산물물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2.6%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으며,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9% 각각 상승했으며, 세부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1.4%, 식품 이외는 3.9%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8%, 전년동월대비 6.1% 각각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4.2% 상승, 신선채소 12.7%, 신선과실 6.3% 각각 하락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4월

| 재정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외결 확정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가결산제도 이야기

국가결산제도는 정부 살림의 실제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핵심 도구지만, 발생주의 도입 이후에도 복잡한 재무제표와 낮은 활용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개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재정건전성 분석과 정책 정보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미래 재정 전망과 정책 효과 분석, 주요 이슈 설명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국가결산제도가 진정한 국민 중심의 재정 소통 도구가 되려면, 수치 나열 중심에서 정책 분석 중심으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예산과 결산

예산이 정부 살림살이의 계획이라고 하면 결산은 실제 집행의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결산은 1회계연도(1~12월) 동안 정부가 사용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작성, 감사원이 검사 후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식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4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규모를 초과했고 세출예산 집행률도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수입 637.4조 원에서 총지출 684.1조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7조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

재정수지는 104.2조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이다. 눈에 띄는 특징적인 현상은 국민연금기금 2025년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해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44.4조 원 증가하는 등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되었다.

문제는 결산에 대한 가시성의 한계이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알기 쉬운 재정 사이트는 재정개요, 재정운용, 재정교실, 재정이야기, 그리고 재정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재정운용, 단 한 항목에서만, ‘한눈에 보는 결산’이라는 창에서 재정건전성(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중), 재정운용(재정운용순원가, 비교환수익, 재정운영결과), 재정상태(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의 숫자만 나열되어있어 나라살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결산보고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재정 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가독성이 떨어진 다. 국가가 내 돈을 어떻게 책임 있게 잘 썼는가를 납 세자인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어야 하는데 항목 별 집행 금액 나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결 산보고서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국가회계법 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크게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다. 하나씩 살펴보자.

가. 현금주의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예산에 따라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세입), 얼마나 나 갔는지(세출)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방식의 결산이다. 세입결산은 조세 중심의 수입금 등 정부가 실제로 거 뒀던 금액을 집계한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¹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 액, 쓰지 못한 불용액 등을 기록한다. 결산상 잉여금 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잔액으로, 국세징수액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계획보다 적을 때 발생 한다.

나.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

단순한 현금의 흐름을 넘어, 국가의 자산과 부채를 기업 회계와 유사한 방식(복식부기·발생주의)으로 나타낸다. 같은 현금 지출이라도 소비성 지출과 투자 성 지출이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 서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12월 31일) 기준 국가의 자 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보여준다.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가 수행한 업무의 원가와 수익 을 나타내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데 사 용된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중 순자산이 어떻 게 변화했는지 그 흐름을 보여준다. 자산이 회계실체 (accounting entity)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때 순자 산은 여기서 남의 것, 즉 부채를 제외한 내 것의 변화 를 보고한다.

1.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에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이용과 전용 등 증감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실제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현재 한도액을 의미한다.

다. 성과보고서

예산을 지출해 실제로 의도한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부분이다. 예산이 국민들에게 사업패키지를 통해 후생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결산은 실제 살림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에 대한 보고인 것이다. 성과보고를 통해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 지표(예: 도로 건설 연장, 복지 수혜 인원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여 보고한다. 환류 기능도 중요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위 핵심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상세 내역을 보완한다. 첫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현황을 집계하여 국가재정 건전성을 점검한다. 둘째, 조세지출보고서로 세금 비과세와 감면 등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정리한다.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리 받아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지원방식으로 음(-)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기금결산보고서로 예산 외에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의 집행 결과를 포함하는데 2025년 현재 67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다. 이중 48개는 사업성 기금인데 정부가 특정 공공 목적 사업(주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여유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다. 예산과 달리 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주요 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이 있어 사업 목적에 맞는 자금 지원 및 융자 사업에 활용된다.²

결산보고서 개편

우리나라는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했고, 2011회계연도부터는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공시해 왔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결산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져 왔다.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의 주된 저해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분량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가재무제표 자체의 난해함과 복잡성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국민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내걸고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5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 중심 결산서 제공, 재무제표기반 결산분석기능 확대, 그리고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전면 개편하고,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설하며,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확대·단일화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재정상태표의 분류체계의 간소화, 재정운영표의 예산분야별·성질별 공시, 현금흐름표 도입 및 주석체계의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지적된다. 재무제표기반 결산 분석기능 확대라는 기본방향에 부합되

2. 이 외에 사회보험성기금으로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해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성기금은 보증이나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을 한다. 한편 재정성기금은 특정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록 개편된 결산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령,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나 실행 방안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예산 정보와 연계하는 지표나 국가결산보고서를 이용한 국가부채나 채무의 관리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금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결산은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발생주의 도입 14년이 지났으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복잡·전문적이고 내용이 방대하여 활용성이 낮은 문제점이 계속 남는다. 예를 들어 재정상태표(B/S)는 표 하나임에도 8페이지 분량으로 많은 전문 정보가 있어 정보 전달력이 부족하다.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를 단순화하고 분량을 축소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요국의 결산보고

주요국 결산보고는 첫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기구의 소속기관과 관련성을 보인다. 주요국의 감사기구는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행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시적인 결산감사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무제표 감사에 따른 의견 표명이 가능한 체제다. 우리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감사기구와 같이 재무제표 결산감사기능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감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결

산검사 시에 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예산집행의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합법성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감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산출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감사도 감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준제정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재정경제부 위탁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안전을 상정하고, 재정경제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기 때문에 기준제정기구가 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미국의 결산보고서

미국의 국가결산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partment of Treasury)는 재무부가 회계연도(10~9월) 종료 6개월 후인 매년 3월 의회에 제출된다. 해당 결산서의 목적에 연방정부의 현재 재정상태뿐 아니라 미래 재정전망 및 주요 재정이슈를 함께 보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결산서의 포괄범위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중앙관서(각 부처)의 산하기관을 포함하고 (24개 중앙관서 및 138개 결산 포함기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은 제외된다. 미국의 국가결산서는 요약, 재무제표, 기타 및 부록 순서로 구성되는데, 약 260쪽의 분량으로 핵심 정보만 제공한다. 각 구성 요소 중 재무제표 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재정운영표, 발생주의 수지 차와 현금주의 적자 간 비교, 현금흐름표, 재정상

대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사회보험 보고서), 주식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국가 재무제표는 정책결산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정책 전망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1940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가채무 및 최근 5년 대상의 부채 정보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75년에 대한 재정건전성 전망 정보와,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개혁을 정상 추진 시와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 등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별 원가 정보와 공적 연금 및 보험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은 국가결산서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정부의 제반 성명서(statement)를 제공하는데, 이는 정책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 감사원은 각 기관별 회계검사 의견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앙관서 24개 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견이 적정인 기관은 22개, 한정인 기관은 1개(주택도시개발부), 의견거절인 기관은 1개(국방부)로서, 미국의 모든 중앙관서가 재무제표를 결함 없이 작성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결산서에서 미국 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이에 대한 관리 등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성명서(statement)로 제공한다. 한편, 미국의 국가결산서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총괄, 관서별, 회계기금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나. 영국

영국의 국가결산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HM Treasury)는 재무부가 회계연도(4~3월) 종료 이후 의회에 제출된다. 해당 결산서의 목적에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가 아닌,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4개 지역의

연합 국가로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여기에 공기업까지 추가하여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국의 국가결산서는 개요 및 성과분석, 작성 기관의 의무, 정부 성명서(statement), 재무제표, 감사원 보고서, 부록 순서로 구성되는데, 약 200쪽의 분량으로 핵심 정보만으로 분량 측면에서는 재무제표가 우선시되고 있다.

영국의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국가 재무제표는 정책결산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분석 정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분석 정보는 현황 수준을 제공할 뿐 이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재무제표에서 미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망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영국은 국가결산서에서 성과정보를 강조한다. 한눈에 보는 성과정보(Performance at a Glance)를 국가 전체 관점에서 주요 분야별 핵심 사항을 투자 금액 위주로 제공한다. 영국의 국가결산서는 주요 국정과제 또는 정책 정보를 성과보고 부분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EU 탈퇴, 팬데믹이 영국 정부의 수입, 지출, 부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영국의 국가결산서는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부채의 주요 항목별 추이 등 자산, 부채의 항목별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세목별 징수금액이 증가하거나 줄어든 이유 등 세목별, 세외수입 항목별 분석 정보를 성과분석 부분에서 제공한다. 한편, 영국의 국가결산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중앙관서별 결산서에서 제공된다.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결산서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정부의 제반 보고서를 제공한다. 감



사원의 회계감사 결과는 총괄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결산서 작성 범위, 거버넌스, 정보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된 수입, 지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친다.

나가며

미국,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결산에서 정책결산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결산서상 국가결산의 목적인 성과 또는 정책에 대한 보고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국가결산서의 성과 정보는 성과지표의 형식적인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정보보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거나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 또는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정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결산에서 재정 건전성의 현황 정보는 수치로 제공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영국

에서 제공하지 않는 현금주의 결산 정보는 정책이 아닌 수치 정보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책임성 차원의 성명서(statement) 중심의 결산보고가 되어야 한다. 활용에 중점을 둔 국가결산제도의 또 한 번의 심층 개편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혜수·정도진, 2025년 시행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에 대한 검토, 상업경영연구, 제38권 제4호, 2024
박재환·이남주,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 감사보고서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2012
정도진·김종현, 국가결산보고서 활용, 국제회계연구, 제60집, 2015

재정에서 혁신과 성장으로

정부가 2026년 R&D 분야에 35.5조 원을 투자하며 혁신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R&D 재정지출이 OECD 최상위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만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특허 데이터 분석 결과, 대기업이 창출한 지식과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으며, 혁신 생태계가 소수 대기업에만 고착화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늘어나도 기업 간 지식의 흐름이 단절되면 재정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 확대보다 기술 이전과 인적 자본 흐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지홍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커지는 재정의 역할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726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같은 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내 정부 지출의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저성장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경기 부양뿐 아니라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지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 R&D 분야 재정투자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35.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며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촉진

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산업 현장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의 이러한 국가 주도형 R&D 정책은 경쟁국 대만과 대비된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R&D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GDP 대비 비중은 약 0.7% 수준에서 최근에는 1.1~1.2%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반면 대만은 전체 R&D 투자 비중 자체는 매우 높지만, 정부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GDP 대비 약 0.5~0.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 특히 반도체 기업 중심의 투자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대만의 최근 GDP 성장률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확대 재정에 기반한 국가 주도형 R&D 정책이 실제 혁신과 성장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재정을 통한 혁신생태계 확대노력

R&D 투자에서 정부 비중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들 수 있다. 한국 산업은 매출이나 고용보다 지식 창출 부문에서 특히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필자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과 미국에 등록한 특허 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10대 및 100대 기업에 특허 자산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지홍, 2024).¹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의 거의 대부분을 상위 10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도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는 분석 기간인 2002~2016년 동안 약 95%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 자료를 활용해 한국과 대만의 특허권자 집중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은 한국에 비해 특허권자 집중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지식 창출의 기반이 한국보다 훨씬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지홍, 2018).²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울어진 혁신 역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R&D 분야 재정투자에서도 관련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3.4조 원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산업 집중도를 완화하며 경쟁과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밖에도 R&D 세액

공제 제도에서도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재정 정책을 통해 지식 창출 부문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혁신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뿐 아니라, 재분배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당성을 가진다.

R&D 재정 투자와 지식의 전파

문제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혁신 역량의 소수 대기업 집중 현상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R&D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자칫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R&D 세액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R&D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혁신 창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다. 또한 시장의 경쟁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우대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의 전파’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지홍·송근상, 2025).³ 새롭게 창출된 지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공공재로서 기능하며, 국가

1 이지홍 (2024):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과 집중도”, 『경제논집』 63(1), 3-18.

2 이지홍(2018): “특허자료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지식 확산 경로 분석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8-07.

3 이지홍·송근상(2025): “한국 경제의 혁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지식 전파 양상”, 『한국경제포럼』 17(4), 59-76.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개입과 재정 지원 역시 이러한 파급효과를 전제로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특허의 인용·피인용 관계를 활용해 기업 간 지식 전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에서는 혁신 선도기업인 대기업과 후발기업인 중소기업 사이의 지식 확

산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 단절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혁신의 집중과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지홍·송근상(2025)에서 가져온 <표 1>은 한국과

<표 1> 기업 규모별 피인용 특허 인용 비율

인용/ 피인용	2002-2006			2007-2011			2012-2016		
	대기업	중견	중소	대기업	중견	중소	대기업	중견	중소
대기업	66.22	36.41	37.42	65.17	27.18	26.18	58.5	20.71	20.25
중견	2.31	44.35	7.36	4.54	51.41	11.31	3.28	61.69	11.16
중소	1.4	5.87	37.12	3.74	12.12	56.16	2.91	10.79	64.89
해외	30.07	13.37	18.1	26.56	9.29	6.25	35.31	6.81	3.7

미국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권자 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한 뒤, 각 피인용 특허가 어떤 규모의 기업 특허에 인용되었는지를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각 열에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인용 비중과 해외출원인의 인용 비중을 합하면 100%가 된다.

표에서 확인되듯, 대기업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인용하는 비율은 모든 시기에서 매우 낮았으며 (2~4%), 동시에 중견·중소기업 특허를 대기업이 인용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해외출원인의 대기업 특허 인용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특허의 해외출원인 인용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후발기업 간 기술적 연관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들의 지식 격차가 심화되어 후발기업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동일 집단 내 특허 인용 비율이 크

게 증가했는데, 이 또한 기업 규모별로 지식 교류가 내부에 머무르고 집단 간 지식 전파는 단절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한국 경제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는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과 기술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혁신이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정부 재정은 이러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4 Kwon, H-S, J. Lee, S. Lee, R. Oh (2022): "Knowledge spillovers and patent citations: trends in geographic localization, 1976-2015",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31(3), 123-147.

간 혁신 생태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의 지식과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이 기대하는 외부효과 역시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성장을 둔화를 막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와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단절된 혁신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혁신 선도기업의 지식과 기술이 후발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 자본과 혁신 역량은 조세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적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뒤쳐진 기업과 연구자를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지식과 기술의 파급효과가 낮을 가능성도 큰 만큼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 제언

지식 전파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논의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 선도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후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인적 자본의 축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 및 노동시장 구조는 첨단 기술과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규제와 경직적인 인력 배분 구조는 우수 인재가 특정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대학 및 노동시장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동시에 해외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급 혁신 인력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충분한 성장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기술의 이동이 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도기업 내부의 우수 인력이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나 기술 기반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창업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식 자본과 혁신 역량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인재 이동과 창업 활성화가 지식 전파를 촉진하는 핵심 경로가 될 것이다.

한편 산업 클러스터 정책 역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지식 전파의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이며,⁴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은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내부의 지식 전파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쟁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인위적 분산 정책이 오히려 기업 간 집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지식 전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단순한 지역 균형보다 혁신 확산의 효율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대동법은 조선후기 중앙재정을 어떻게 바꾸어놓았을까?

백성의 공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동법의 시행관서로 설립된 선혜청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후기 최대 재정기구로 성장했다. 선혜청은 대동세의 출납은 물론, 도성 안팎의 창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류의 조달과 배분을 장악하고, 군역청을 합설해 군사기구로의 원활한 재정지원에도 기여했다. 이는 현물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화된 재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선왕조의 전략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란 이후 조선왕조가 다시 300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같은 선혜청 중심의 재정개혁에 기인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주희 덕성여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선혜청, 조선후기 최대 재정기구로의 성장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선혜법을 시작으로, 한 세기에 걸쳐 전국에 확대 시행된 대동법은 조선후기 재정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가시적인 변화는 새로운 재정기구의 설립으로 시작됐다. 국가재정을 주관하는 호조와 별개로 토지세를 거두는 또 하나의 관서가 ‘선혜청(宣惠廳)’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현물재정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토지세(租)는 호조에서, 공물(調)은 왕실 각 전궁과 각사(各司)에서, 군포(庸)는 병조에서 수취하는 구조를 갖추고 이를 『경국대전』에 성문화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호조와 동일하게 토지에서 세를 거두되, 수취 규모 면에서 호조를 능가하는 수취기구가 중앙에 신설되었다. 실제로 호조에서 거두는 전세는 인조 13년(1635) 영정법 시행 당시 1결당 4두(斗: 말)로 고정되었던 반면, 선혜청에서 거두는 대동세는 1결당 12두로 세 배 가량 많은 세액이 책정되었다.

전세는 세종대 공법(貢法) 시행 당시 비옥도에 따라 토지 1결(結: 100점의 벼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6등급으로 차등 구획하고, 매해 풍흉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과전법 해체 이후 왕실과 양반 관료들의 무주지 개간이 활발해지면서, 개간지에 몇 해 간 면세 혜택이 주어져 전세가 제대로 수취되지 못한 데다가 개별 농지마다 작황을 매년 새로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전세 행정의 피로도가 상당했다. 지주의 입장에서 급격한 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개간한 토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수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중앙에서는 최저 연분 등급인 전세 4~6두를 관행적으로 거두게 되었다. 영정법은 이러한 전세 수취 관행을 제도화시킨 조치였다.

반면 대동세는 처음부터 전세보다 결당 세율이 높게 산정되었다. 전세는 토지 품질과 매년 풍흉을 고려해 수취액을 정했지만, 공물은 애초에 왕실 부양과 관서 행정에 필요한 일정량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에 수취해 온 공물량만큼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쌀을 민간에서 거두어야 했다. 여기에 공물 조달을 책임지는 공인 몫의 역가(役價: 노동 비용)와 지방 행정경비로 쓰이는 유치미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토지 1결당 대동세는 호조의 전세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각도에 부과된 대동세는 공물가보다 4~5배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경기도 지역은 선혜법 시행 당시 1결당 쌀 16두가 부과되었으며, 충청도는 결당 10두, 전라도와 경상도는 결당 각각 13두가 부과되었다.

현종대 이후 각도 대동세는 결당 12두로 통일되어 갔으며, 이렇게 상납된 대동미는 18세기 들어 평균 25~30만석(石: 섬)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호조의 전 세 수입은 같은 시기 10만석 정도에 그쳤으며, 이는 중앙 관료와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로 거의 소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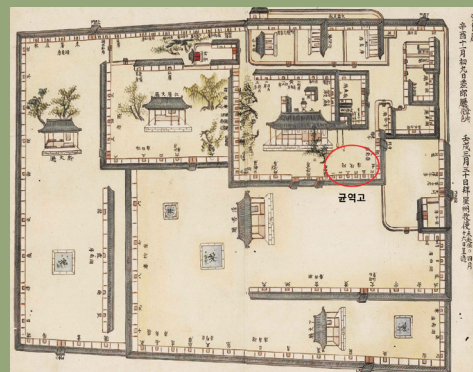
선혜청, 중앙의 물류체계를 바꾸다

대동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에는 선혜청 청사와 부속 창고들이 도성 안팎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물론 선초부터 서울에는 호조 관할 재정 창고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군량미를 비축하는 군자감과 관원의 녹봉을 지급하는 광흥창, 각사의 경비를 관리하는 풍저창 등이 그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풍저창은 장흥고에 병합된 반면, 훈련도감군의 급료를 지급하는 별영(別營)과 중국 사신의 접대물자를 조달하는 분호조고(分戶曹庫), 시급한 경비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별고(別庫), 국용 목재를 조달하는 목물고(木物庫), 동전 주조를 위한 주전소(鑄錢所) 등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선혜청 본청 건물과
부속 창고들 역시 서울 숭례문 안과 소의문 안쪽, 주



01



02

자동과 삼청동, 용산, 만리현 인근에 다수 들어섰다. 승례문 안쪽에 설치된 내청고는 84문(門)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현종 2년(1661) 소의문 안쪽에 증설된 별창고 역시 67문에 달하였다. 이들 내청고와 별창고에서는 경기청, 강원청, 호서청, 호남청, 영남청, 해서청 등 선혜 각청의 회계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용산과 만리현에 위치한 강창(江倉)과 구진창고(舊賑倉庫), 신창고(新倉庫) 등에서는 한강 포구에 집하되는 쌀과 잡곡을 수송, 보관, 출납하는 업무를 맡았다. 창고에 보관된 곡식과 포목은 공물주인에게 지급되어 서울시장에 유통되었다.

이처럼 선혜청 창고를 도성 안팎에 설치하면서 중앙 정부는 백성을 모집하여 각 창마다 주인(主人)과 역인(役人)을 두었는데, 창주인에게는 도적으로부터 창고곡을 지키고 곳간을 수리하는 업무를 맡겼으며, 역인에게는 세곡을 실어 나르는 하역 업무를 맡겼다. 이들은 처음에는 선혜청 주변에 모여 살면서 선혜청으로부터 역가를 받아 생활했는데, 이후 선혜청모민계(宣惠廳募民契)를 결성해 선혜청 창고뿐 아니라 인근 호조창과 각사의 외창 곡물도 운반해주는 전문 하역 운송업자로 변신하였다. 이에 도성민들 몇몇이 운석계를 결성하여 선혜청모민계의 하역업 일부를 빼앗자 양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도성 안팎으로 왕실과 중앙각사에 공물을 진배하고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먹는 공물주인과 공계(貢契)도 늘어났다. 공물주인 역시 처음에는 각사에 소속되어 자질구레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방납에 관여하던 자(私主人)들이었으나,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으로부터 거액의 공물가를 받아 조달역을 수행하는 주인층으로 거듭났다.

대동법 시행 이후 현물공납제 하에서 각 읍의 공리(貢吏: 공물 조달을 맡아보던 향리의 일종)들이 공물을 싣고 서울로 올라와 각사에 진배하던 풍경은 사



03 대동법 시행기념비(출처: 국가유산청,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을 기념해 세워진 비석으로, 공납제 개혁과 재정제도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라지고, 공물주인들이 선혜청 본청과 창고에서 공물가를 지급 받아 시중 구매하거나 자체 제작한 물품을 왕실, 각사에 조달하는 물류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 서울은 대규모 세곡창고가 들어서고, 물품의 구매, 제작, 조달을 책임지는 상인층(공물주인, 시전상인)이 활동하는, 대규모 물류유통공간이자 소비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선혜청에 보관된 대동미는 겉으로는 왕실과 중앙각사의 경비로 쓰이는 듯했지만, 실상은 도성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인층에게 공물가 및 역가로 지급됨으로써 이들의 생활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다.

선혜청은 단순히 대동세를 출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처럼 왕실부양과 각사행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도성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혜청과 여타 재정기구와의 관계

선혜청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 선혜청의 재원 역시 공물가뿐 아니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영역에 할애되었다. 대표적으로 도성 방어를 위한 군량미로 비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숙종 12년(1686) 중앙정부는 삼청동에 소재한 구 충용청터에 북창을 짓고 선혜청 강창의 곡식을 일부 떼어 군량곡으로 비축해 두었으며, 숙종 39년(1713)에는 북한산성 축성 후 탕춘대에 창고를 지어 선혜청의 곡식 일부를 비축해두었다. 영조 23년(1747)에는 충용청을 탕춘대로 옮기면서 탕춘창에 보관된 대동미를 충용청에 이관해주는 대신, 경리청 소속 평창 곡식을 선혜청 소관곡으로 바꾸어주었다. 이처럼 선혜청의 대동미는 도성 방어의 요충지에 자리한 창고에 군량미로 비축되었다.

선혜청의 운영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균역청과의 관계이다. 균역청은 영조 26년(1750)에 공포된 균역법의 시행관서로서, 흔히 선혜청과 구분되는 별도 기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조 29년(1753) 이후 선혜청의 합설기구로 운영되었다. 균역청 본청은 주자동에 있었지만, 선혜청에 합설된 이후 선혜청 내에 균역청 사무실과 창고를 설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선혜청의 쌀과 균역청의 동전을 교환해 쓰는 상보적 회계 구조를 유지하였다. 균역청의 수입은 군포와 결전(結錢: 토지에 세로 부과하는 동전)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쌀이 필요할 때 선혜청에 보관된 대동미를 가져다 쓰고 이를 동전가로 갚아주는 회계방식을 용인해준 것이다. 실제로 『숙천제아도』 내 선혜청관아도를 살펴보면, 선혜청의 건물에 선혜 각청과 균역청 창고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균역청은 병조와 오군문에서 수취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 왕실의 어염선세를

회수하고 각읍의 숨겨둔 토지를 색출해 재원을 마련한 후 보전(給代)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균역법 시행 후 병조와 오군문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줄어든 수입을 보전해주는 균역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균역청을 영조 29년(1753)부터 선혜청의 합설기구로 운영했다는 것은 선혜청-균역청이 중앙의 공물재정뿐 아니라 군사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관서로 역할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선혜청, 균역청과 같은 재정기구의 운영을 ‘재정기구의 난립’으로 평가하며, 조선후기 재정 문란을 야기한 주범으로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18세기 이후 선혜청이 재정물류면에서 호조를 뒷받침하고 균역청을 합설기구로 운영한 점을 간과한, 다소 피상적인 비판이다. 조선왕조는 대동법 시행 이후 현물재정을 얼마간 극복한 시장조달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물류의 조달과 배분에 유리한 재정기구의 신설과 탄력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모색했다. 이것이 근대국가의 단일화된 재정기구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물경제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정개혁 방안이었던 점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조선후기 공물 변동과 균역 변동의 결과로 세워진 선혜청과 합설 균역청이 조선후기 최대 재정관서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조선왕조의 재정이념이 ‘부국강병(富國強兵)’보다는 ‘안민(安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혜청의 확대 운영은 전란 이후 조선왕조가 다시 300년간 유지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이번 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대동법이 조선후기 재정구조에 미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안중근, 나라살림의 대의^{大義}를 묻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그가 남긴 말 중 하나는 ‘재정과 군기’의 중요성이었다. 100년 전 조선의 선각자가 강조한 재정의 원칙이란 무엇이였을까? 저출산·고령화·재정적자로 신음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구국운동과 함께 정의·민중·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의 재정인식을 살펴본다.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이름
안중근(安重根)
생물연도
1879년 9월 2일(고종 16년) ~
1910년 3월 26일(순종 4년)
국적
조선(대한제국)
활동
항일독립운동가, 의열가
주요 사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일본 초대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 암살
본관
순흥(順興)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방아쇠가 밝혀 준 광복의 길,
그 숭고한 용기를 잊지 않습니다.”

- 시민 김0송 -

서언

안중근 의사(1879-1909)는 한말 우리 민족이 낳은 대표적인 선각자이자 의열투쟁가이다.¹ 특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일제 하 한국독립운동사의 금자탑을 형성하고 있다. 하얼빈 의거가 없었다면 한국독립운동사는 새롭게 작성될 정도로 그 의미가 지대하다. 이런 점에서 하얼빈 의거는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의 차원에서 보다 깊게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단행한 것은 그냥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과 민족과 세계에 대한 확고부동한 사상과 철학을 기초하고 있다. 그는 비록 31세의 젊은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여순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는 정치, 경제, 국제정치, 교육 등 등의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상체계를 지니고 있었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다. 특히 그의 심문조서와 옥중에서 작성한 자서전(안응칠역사)과 동양평화론 등을 면밀히 숙독해보면 그가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 사상가인지 알 수 있다.

이 글은 안중근 의사의 재정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살림이다. “한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이 개인의 삶과 경제 활동과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³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가 심화되면 모순이 되고 모순이 심화되면 위기로 확산된다. 모든 위기 중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크게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국가채무도 GDP 대비 50%를 넘겨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선각자인 안중근 의사의 재정의 원칙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 원칙을 정함에 있어 큰 사상적 동력(動力)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회에 걸친 연재에서 이번 회는 그의 재정운영의 원칙을, 다음 호는 그의 재정철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안중근 의사의 구국운동과 사상

“이제 우리들이 한번 의거로써 성공할 수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첫 번에 이루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열 번에 이르고, 백번 꺾어도 굴함이 없이,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명년에 도모하고, 명년, 내명년, 십 년, 백 년까지 가도 좋다. 만일 우리 대에 목적을 못 이루면, 아들 대, 손자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야 말 것이다.”⁴

1 정경환, “안중근의 역사관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13권 제2호(한국민족사상학회, 2019), p.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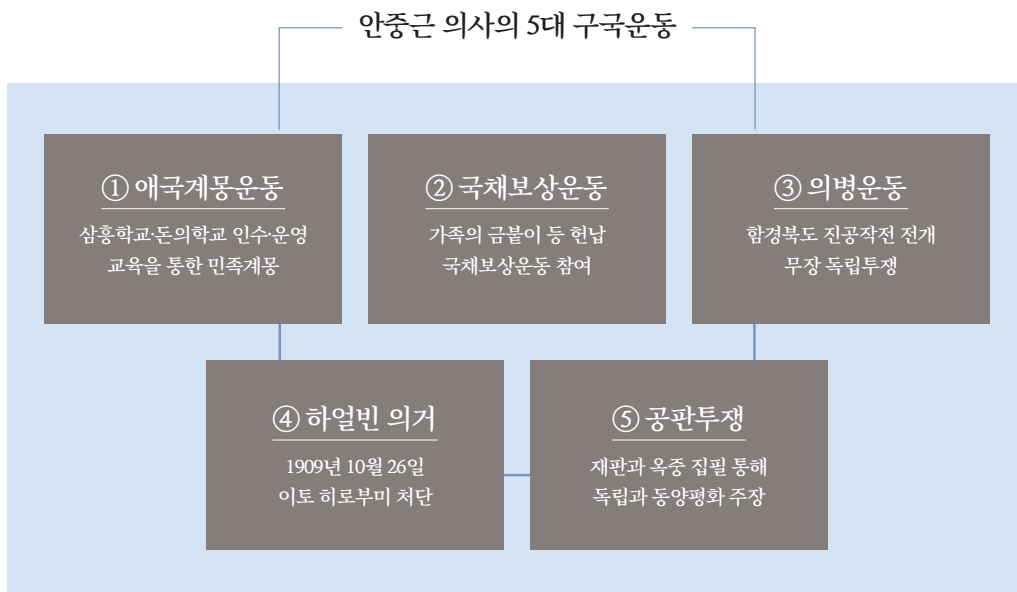
2 정경환, “안중근의 국가론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6권 제2호(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p.74.

3 황성현,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서울: 도서출판 해남, 2024), p.19.

4 안중근(저)·이은상(번역), 『안중근의사자서전』(서울: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1982), P.131.

안중근 의사의 위의 말은 그의 애국·애족심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그의 활동을 구국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구국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활동의 연속성, 장기성, 일관성 그리고 사상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⁵ 안중근 의사의 구국운동은 크게 애국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의병운동, 하얼빈 의거 및 공판투쟁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된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지적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의 구국운동의 핵심 목표는 조국과 민족의 완전한 독립국가 그것도 민권과 자유가 꽃피는 독립국가의 건설이었다.⁶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본격적인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 및 인수하여 교장직을 맡으면서 교육운동을 통한 본격적인 구국운동에 전념하게 된다. 이어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술선수범하여 가족이 소유한 금불이 등 귀중품을 헌납하였다.⁷ 이후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반 하얼빈 역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를 척살함으로써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그 다음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의기와 민족애로써 공판투쟁을 감행하였다.

이런 안중근 의사의 불굴의 구국운동은 그의 사상 즉 반제국주의론, 독립전쟁론, 자유민권론 및 동양평화론에 의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경환, “안중근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제3권 제1호(한국민족사상학회, 2009), p.69.

6 현재 필자는 2005년에 발간한 『백범김구연구전집』(전5권)에 이어 안중근, 도산안창호, 단재신채호, 만해한용운 연구전집(각 5권씩)을 집필 중에 있다. ‘안중근 연구전집 제1권 정치사상편’에서 그의 구국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7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 안솔로지 : 다시 안중근을 읽는 시간』(서울: 서울셀렉션, 2019), p.29.



서울 남산공원에 자리한 안중근 기념관



서울 남산공원에 위치한 안중근의사 동상

안중근 의사의 정의와 책임의 재정운영 원칙

1907년 7월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폐위하고 소위 정미7조약을 맺어 군대를 해산하고 산림, 광산 및 철도 운영권을 강제 탈취하였다. 이에 안중근 의사는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직시하고 해외 망명을 통한 무장투쟁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때 러시아 연추에서 만난 이범윤(대한제국에서 북간도 관리사 역임)과의 대화에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이나 군기(軍器)를 마련할 길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라는 이범윤의 말에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흥망이 조석에 달렸는데, 다만 팔장만 끼고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재정과 군기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올 것입니까?”라고⁸ 언급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양대 정책이 바로 재정정책과 안보정책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가? 첫째, 안중근 의사의 모든 행동의 원리는 바로 ‘정의’다. 그의 정의론은 대의론을 기초하고 있다. 안 의사의 대의론은 인간존중주의와 천명론과 이치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그의 재정원칙은 대의중시론이다. 사사로운 개인적 견해나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대의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민중중심주의다. “만일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어디 있을 것이요. 더구나 나라란 몇 개의 대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2천만 민족의 나라인데”⁹라고 말한 안 의사의 언급은 애민주의에 의한 민중중심주의적 재정원칙을 설파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국가우선주의이다. 그는 1909년 12월 20일 열린 심문에서 이토오를 척살한 것은 “나는 오직 국가를 위해 진력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국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국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 재정이든 안보이든 교육이든 모든 정책 입안자들은 항상 국가와 나를 일체화시켜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애국·애국심을 정책 입안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8 안중근(지)·이은상(번역), 앞의 책, p.119. 祖國興亡在於朝夕 而但束手坐待則 財政軍器將從天而落之乎

9 위의 책, p.101. 若人民無之則 國家 何以有之 況國家 非幾個大官之國家 堂堂二千萬民族之國家

정부 재정, 기초부터 미래까지 제대로 이해하기 “투명한 결산 정보로 변화하는 경제에 대비하다”

이 책은

환율, 금리, 경상수지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재정의 기초를 설명하는
재정경제 입문서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황성현 저 | 해냄(2024년)

한국은행에서 실무를 쌓은 저자가 시장의 기본 원리와 정부 역할의 균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국가결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부 재정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결과가 환율, 금리,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가결산으로 드러난다. 특히 역사적 사례와 주요국의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기초가 튼튼해야 중장기 재정 건전성도 확보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성과를 국민이 제대로 평가하고 신뢰하려면 국가결산 정보가 명확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주는 책이다.

국가결산과 재정투명성의 핵심 포인트

- **정부 재정 성과의 기초:** 환율, 금리,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정부 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함으로써, 국가결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조정 기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결산 공시 방식을 모색한다.
- **재정정보의 국민 친화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정부 재정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 정보의 설명 방식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을 인식한다.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황성현 저

해냄

5월은 국가결산이 공개되고 상반기 재정 성과가 평가되는 시점이다. 정부 재정이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동시에 AI,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구조적 변화가 심화 되는 경제 환경에서 국가결산 방식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재정의 기본 원리부터 미래 경제 시나리오까지, 국가결산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조망하는 두 권의 필독서를 추천한다.



『제3의 달러』

김창익저 | 경이로움(2026년)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 글로벌 경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국가 재정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경제 시나리오. 국제미래학 전문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의 중기(10년)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결산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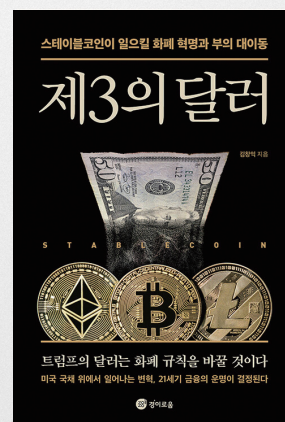
기술혁신, 인구 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 등 경제의 근본적 재편 속에서 정부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며,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국가결산 개편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래 경제 시나리오를 통해 현재의 국가결산 방식이 충분한지, 새로운 지표와 측정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지 성찰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 책은

21세기 디지털
금융 대전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새로운 화폐 혁명과
부의 대이동

국가결산 개편과 미래 경제의 연결 포인트

- **산업 구조 변화와 결산 항목 재편:** AI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산업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정부 투자 영역과 성과 측정 지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함을 인식한다.
- **중장기 재정 기획과 국가결산:** 단기 예산 중심의 결산에서 벗어나 10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 목표와 성과를 추적하는 국가결산 체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지속가능성 지표의 확대:** 탄소중립, 기술혁신, 인구 구조 변화 등 신규 과제에 대한 정부 재정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NEWS

2026 May vol. 113

한국재정정보원, NATO 주관 '락드실즈 2026' 국제 사이버 훈련 참가, 보안 역량 입증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 방위 센터(CDCOE) 주관으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 공격·방어 훈련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6'에 참가하여 위협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락드실즈'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시간 사이버 방어 훈련이다. 전 세계 39개국에서 사이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민·관·군 47개 기관 170여 명으로 연합팀(헝가리 포함)을 구성하여 NATO 공격팀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했다. 특히 재정원은 이번 훈련에 기관 차원의 첫 출전을 결정하고, 단순한 훈련 참여를 넘어 습득한 최신 사이버 공격 기법과 방어 기술을 기관 내부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내 '화이트 해커(사이버 방어 전문가)' 조직을 양성하고, 선제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락드실즈 첫 참가는 기관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보안 전문 인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자산과 국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NEWS

2026 May vol. 113

한국재정정보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하여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40개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된 강화된 평가 기준 속에서도 재정원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재정보원은 임직원의 보안 의식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주도적 노력이 인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센터 신설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노력’ 지표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이 보통 수준에 그친 반면, 재정보원은 우수로 평가받으며 차별화된 성과를 입증했다는 것이다. 윤석호 원장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국가 재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 2026.05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국가재정의 현금 흐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새롭게 도입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① 재정상태표 ② 현금흐름표
- ③ 재정수지표 ④ 결산개요서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5.29. ~ 6.15.

★ 지난호 정답: ② 기획예산처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3927	010-****-7702	
010-****-2933	010-****-6333	010-****-5455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4로 문의 바랍니다.

2026 강릉단오제

풀리니, 단오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굿판에서 **한**을 풀고
창포물로 **액**을 풀고
난장에서 **이야기**를 풀고

마음을 풀고
서로가 함께 풀리는 순간, 단오



6.15^날 - 6.22^날

www.danojefestival.or.kr

새강릉단오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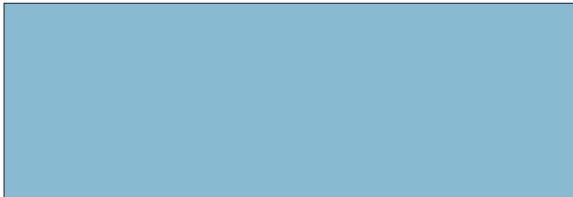
국가무형유산
새강릉단오제보존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여는 건강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 기간 | 2026년 5월 16일(토) ~ 7월 31일(금) | 대상 | 19세 이상 성인

